

58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K-방역, K-민주주의, 그리고 K-민족주의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방역, K-민주주의, 그리고 K-민족주의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01

K-방역과 K-민주주의

2020년 초중반 한국의 코로나 방역의 성과는 눈부셨다. 2019년 12월 31일에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 우한에서의 신종감염병이 보고된 이후 코로나19가 급속히 전세계에 확산되던 시기 한국 정부의 방역 정책은 신속했고 정확했으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확진자 수는 급증했으나, 의료인력의 파견, 마스크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노력으로 한 달여 만에 확산을 잠재우는 성과를 보였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의 수급을 둘러싸고 비판이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성공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의 근거에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 그리고 각종 경제 수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K-방역 성과의 원인을 정치 체제와 문화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황정아 교수는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한 나라와 달리 한국은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통제'가 작동했기 때문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¹⁾ 즉 한국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지닌 민주성, 수평성 등의 수준 높은 시민성에 근거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것이 한국이 방역을 성공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KDF 리포트 57호에 실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K-Democracy’”의 내용과 연결된다.²⁾ 이 글 역시 K-방역의 성공 원인은 “정부 당국의 리더십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희생을 무릅쓰면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시민들의 참여”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K-민주주의의 중요한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K-방역의 성과가 2015년 불투명한 방역대책으로 ‘메르스(MERS)’의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한 박근혜 정권의 방역 실패와 비교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또한 2016년 촛불혁명의 효용성과 촛불혁명의 결과인 문재인 정권의 업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 필자는 K-방역의 성공 원인을 민주적 시민성이나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으로 평가하려는 흐름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필자가 KDF 리포트 53호에 쓴

1) 황정아, 2020, “팬데믹 시대의 민주주의와 ‘한국모델’”, 창작과 비평 189호.

2) 이원영, 20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K-Democracy’”, KDF Report 57호.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글로벌 생명 헤게모니 경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한 것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겪는 여러 나라에서 방역의 성공을 체제의 우수성이나 민족적 우월성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 모두가 수준 높은 민주적 시민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³⁾ 여러 국가에서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회구조적 문제와 엄격한 방역 정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은폐하기 위하여 방역의 성공을 체제 선전의 도구로 사용했다. 하지만 필자의 이러한 비판적 접근이 한국이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다거나 현재 정부가 방역의 성과를 정권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과연 한국의 시민성과 민주주의가 정말 K-방역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냐는 것이다. 더 나아가 K-방역 성과의 원인을 그러한 것들로 돌리는 바탕에 어떠한 욕망이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 한국 사회가 갖게 되는 긍정적인 것들과 부정적인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3) 김재형, 2020,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기”, KDF Report, 53호.

02

장기코로나 시대의 K-방역의 성과와 한계

2021년 3월 21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억2354만 명에 이르며, 누적 사망자 수는 272만 명이 넘는다. 2020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많았던 한국은 적극적인 방역 활동과 마스크 쓰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산을 막는 데 성공했다. 낮은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에 근거해 K-방역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을 확신했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담론이 확산되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의 성공을 근거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상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0년 중반부터 언택트(untact)라고 하는 뉴노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적인 목표로 상정되었다. 하지만 2020년 11월 말부터 시작한 3차 대유행 이후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논의는 더는 보기 힘들어졌다. 더 나아가 과연 한국은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26,5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021년에 들어와서 확산세는 조금씩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루 4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2020년 12월경부터 미국 등의 나라부터 백신이 사용되기 시작한 반면, 한국은 백신 개발 및 구매에 소홀히 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K-방역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정부는 백신 도입이 늦은 이유를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은 상황에서 백신의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K-방역의 초기 성공에 고무된 나머지 백신에 대해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거셌다.

K-방역이 성공했다는 평가가 도전받는 큰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K-방역의 성공으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현재 여러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음에도 코로나19 종식은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더군다나 백신 접종이 대부분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백신의 효과가 정확히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마스크 쓰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포스트코로나 보다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19) 시대 또는 장기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3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와 2.5단계를 오가면서 몇 개월에 걸쳐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피로도는 어느 때보다 극심해지고 있고 예전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더군다나 일 년이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는 더욱 막심하다. 결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담을 소상공인에게만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2020년 12월경부터 거세졌다. 특히 정부가 업종별로 다른 조치를 하면서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는 업종에서 저항이 거세졌는데, 예를 들어 실내체육시설업계 등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업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장별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어 논란은 쉽게 종식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애초에 정부의 사업별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부담을 사회 전반에 골고루 분배하기보다는 소상공인에게만 지웠기 때문이었다. 대기업이나 공장, 또 반복적으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콜센터 같은 사업장이나 물류 센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요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설정과 적용 과정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1년간 파산신청을 하는 기업과 개인이 전년도에 비해 법인은 약 11.7%, 개인은 약 13%가 증가했다.⁴⁾ 또한 경기가 위축되면서 실업률도 높아졌는데 특히 청년층과 중년 여성층에서 실업률이 더욱 높아졌다.⁵⁾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특정 층에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Ulrich Beck, 1992)은 위험 상황은 이전의 사회구조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계기라고 했는데, 이는 위험 상황에서 사회에 원래 존재했던 다양한 구조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한국 사회에서도 이전부터 존재했던 다양한 불평등 및 배제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청년 세대가 신천지와 같은 종교에 탐닉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났으며, 콜센터나 물류센터와 같은 노동현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환경이 가시화되었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장기간 격리하는 시설의 문제 역시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감염되면서 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숙소사 및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가 대중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시대에 강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방역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은 문제적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데다가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왜 K-방역의 성공이 강조되는 것일까? 왜 K-방역 성공의 원인을 K-민주주의에서 찾고자 하는 것일까?

4) 서울경제, “코로나1년...법인·개인파산 모두 10% 이상 늘어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 2021. 2. 24.

5) 서울경제, “여성에 더 컸던 코로나 충격...9월 여성 취업자 감소폭, 남성의 3배”, 2020. 10. 30.

03

K-방역의 성공 원인은
민주적 시민성 때문?

일단 코로나19 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정치 체제, 또는 시민성이 주목받게 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0년 초 코로나19의 확산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중국인 입국 금지, 국경 봉쇄, 신천지에 대한 처리, 마스크 수급 등 방역과 관련한 여러 정치적 논쟁으로 시끄러웠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했던 시기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불안감과 공포, 분노, 혐오 등의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3월 초부터 외신에서 한국의 방역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하자 이러한 정치적 논쟁은 점차 줄어들었다. 또한 북미와 유럽 등지의 소위 선진국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실패하는 모습을 목도하자 한국 사회는 한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역에 필수적인 인구 이동 통제에 대한 서구 시민들의 반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국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서구에 권위에 순종하는 집단으로 비쳤다. 이러한 인종주의적 오해에 근거해 서구의 몇몇 언론은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방역이 성공한 원인을 유교라고 하는 문화적 요인에서 찾기 시작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했는데, 필자 역시 2020년 3월 30일 독일 슈피겔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러한 주장은 인종주의적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 답했고 원래 계획되었던 기사는 다른 내용으로 11월에 나왔다.⁶⁾

문제는 한국의 방역 성공의 원인을 문화적 요인으로 돌리던 인종주의적 평가가 방역에 대한 한국 사회의 담론 지형을 변화시킨 것이다. 한국 방역에 대한 찬사와 동시에 방역 성공의 원인을 권위주의적 문화로 돌린 일부 서구 지식사회의 평가는 한국 시민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인종주의적 평가는 한국 시민 사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시민 사회는 방역의 성공을 인정받으면서도 방역의 성공이 권위주의적 문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반응은 서구의 부당한 오해를 풀기 위해 당연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방역의 성공 원인을 정치체제나 문화적인 것에서 찾는 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첫 번째 시도가 2020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시사인과 KBS,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6) Spiegel, Wie Ostasien die Coronakrise, 2020. 11. 19. [meisterthttps://www.spiegel.de/politik/ausland/corona-pandemie-wie-ostasien-die-krise-meistert-a-c2e5dc80-2154-4140-a8ae-7571e929f7a6](https://www.spiegel.de/politik/ausland/corona-pandemie-wie-ostasien-die-krise-meistert-a-c2e5dc80-2154-4140-a8ae-7571e929f7a6)

한국의 성공이 유교문화로 인한 순응적, 수직적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적 특징인 개방성, 수평성 때문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웹조사이다.⁷⁾ 조사 결과 수평적 가치관을 가진 집단과 공감 능력이 높은 집단에서 방역에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진은 이것을 자유로운 개인이자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주적 시민성”이 한국의 방역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 조사결과는 권위주의적인 유교 문화를 성공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서구의 시선이 틀렸으며, 더 나아가 K-방역의 성공은 촛불혁명의 결과, 즉 K-민주주의 덕분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황정아, 2020).

하지만 이 조사 직전의 코로나19 상황은 2월 중순 이래 가장 확진자가 적어 4월 말부터 하루 평균 10명 이하가 발생하던 상황이었다. 참고로 5월 5일 신규 확진자는 2명에 불과했다. 그 결과 포스트코로나 담론이 확산되고 ‘K-방역’의 성공이 찬양되었다. 하지만 한국에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가짜 뉴스였고, 혐오 담론이었다. 한국 사회는 첫 번째 확진자의 국적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항의했으며, 중국과의 국경을 닫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온 돌봄 노동자나 건설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혐오와 차별은 처음에는 중국인에서 다음으로는 재중동포로, 이후에는 해외에서 귀국하는 한국인들로, 신천지교도로, 성적소수자로 계속 확산해갔다. 마스크는 어떠한가? 시민들은 마스크 사재기에 나섰고, 마스크 구매를 위하여 거리를 전전했다.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시민들은 마스크를 썼고, 사람들과 만남을 꺼렸다. 하지만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가 타인의 건강,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공적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다.⁸⁾ 즉 5월의 조사는 한국 사회의 코로나19의 역동적 변화 과정에서 상황이 가장 좋을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시민성이 K-방역의 성공 원인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기 힘들다.

7) 시사인,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 의외의 응답 편”, 2020.6.2.

8) 김재형, “불확성 시대의 마스크 시민권”, 추지현 엮음,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돌베개.

04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족주의의 부상

필자는 이전 글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올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지적했다. 방역을 위하여 정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면서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권위주의가 강화되며 민족주의가 부상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을 비인권적이라고 비판한 서구 국가에서도 비상상황에서 비슷한 정책을 취했다. 이것은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에 있어 정치 체제가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유주의나 포퓰리즘 국가에서 주로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냈다.⁹⁾ 오히려 서구 시민사회는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기도 했다. 스페인의 시민사회는 코로나19 확산에 직면하여 정부와 기술관료가 더 강한 지도력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어해줄 것을 요구했다.¹⁰⁾ 이러한 상황은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들 사회에서는 방역을 위하여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합리적이고 심지어 민주적이라고 인식했다.¹¹⁾ 하지만 단기적인 권위주의적 체제의 강화는 효과적으로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민주 사회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공동 웹조사의 다른 결과는 한국 사회 역시 권위주의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¹²⁾ 이 웹조사는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문화가 방역 성공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를 제압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국민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폭넓은 인권 보장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다’,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문제 집단들을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답변을 2016년 KGSS 조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개인의 자유를

9) Gugushvili, Koltai, et al., 2020, Votes, populism, and pandemic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5 (6) pp. 721-722.

10) Amat, Francesc, Albert Falcó-Gimeno, Andreu Arenas, JorMuñoz, 2020, Pandemics meet democracy: Experimental evidence from the COVID-19 crisis in Spain, *SocArXiv*. April 6. doi:10.31235/osf.io/dkusw.

11) Bol, Damien, Marco Giani, André Blais, Peter John Loewen, 2020, “The effect of Covid-19 lockdowns on political support: Some good news for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doi:10.1111/1475-6765.12401.

12) 시사인,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 갈림길에 선 한국 편”, 2020.6.12.

제약하는 정책의 효능감이 권위주의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부정적 변화를 무시하고 K-방역의 성과를 민주적 시민성 또는 K-민주주의로 돌리는 것은 민족주의적 욕망의 발로가 아닌가 싶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20년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후 3월 초까지 한국 사회를 휩쓴 것은 인종주의적 혐오였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시한 백인사회의 아시아인 혐오와 비슷한 수준의 혐오와 낙인 차별이 한국 사회를 뒤덮었으나, K-방역의 성과와 외신의 칭찬 과정에서 이러한 혐오는 비가시화되고 그 자리를 K-민족주의가 대체한 것이다. K-방역의 성공은 3T(Test-Trace-Treat)라고 하는 검사·확진, 역학·추적, 격리·치료 정책과 마스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사스(SARS), 돼지독감, 메르스에 대한 한국 사회의 경험과 이를 교훈 삼아 업그레이드된 한국의 방역 체계 역시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이전의 감염병의 유행과 미세먼지를 경험하면서 마스크에 친숙해진 문화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K-방역 성공의 원인을 과도하게 시민 사회와 민주주의 체제의 성숙으로 돌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타자에 대한 혐오, 엄격한 통제와 감시 및 처벌에 대한 시민사회의 허용성의 증가, 특정한 사회집단에서 감염 위험의 증가, 방역 정책의 사회적 부담의 불평등한 분담, 젠더 불평등의 강화, 디지털 감시 기술의 확산 등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장기 코로나 시대에 K-방역의 평가는 이제 단순히 확진자, 사망자, 각종 경제지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K-방역의 평가는 훨씬 복합적인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증된 적 없는 K-민주주의에 대한 찬양은 수많은 문제들을 비가시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장기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태도는 더 많은 민주주의의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발생한 서울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과 일련의 사건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이들의 열악한 기숙사나 노동 공간에 대한 조치 없이, 이들을 잠재적 전염원으로 낙인찍어 강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게 한 것이다. 더군다나 행정명령에 의하여 수십만 명의 외국인들이 검사장으로 향하는 데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오히려 감염에 노출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를 줄이려는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추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 그리고 혐오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인종주의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외국인노동자에게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이미 전남, 경북, 대구, 경기 등 지자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장기 코로나 시대에 한국 시민 사회가 해야 할 일은 K-방역, K-민주주의에 대한 도취와 찬양이 아니라, 방역의 숫자에 매몰되어 불평등과 배제의 문제를 비가시화하는 또 하나의 우리 모습에 대한 성찰일 것이다.

K-방역, K-민주주의, 그리고 K-민족주의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21년 3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